

<기자회견문>

**뇌물로 얼룩진 정치검찰의 정치구형에 더 이상의 정치적 판결은 없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등 1심 판결보다도 중형을 구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내란의 물증인 무장 폭동 준비나 구체적 합의가 없었음이 명명명백하게 폭로된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째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증거와 법리 그리고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추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음모사건은 1심을 통해 그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최소 450곳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났고,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400곳 이상 추가 수정하며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다. 게다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주동자로 주목된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폭력혁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막무가내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사건조작의 총책임자 남재준이 대화록공개와 간첩증거조작 등 누적된 파문으로 사실상 경질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의 부부장으로 발령까지 받은 검찰 내 최고의 공안통인 정 모 검사도 최근 강서구 재력가 송씨 뇌물수수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뇌물검사가 구형하고 이에 맞장구를 친 1심 판결과 다를 것 없는 구형을 내린 검찰에 김은 유감 전한다.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오늘 선고공판에서도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에 따 판단하고 4대 종교지도자들까지 무죄석방의 탄원서를 내고 있는 등 국내외의 수많은 양심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국정원 내란음모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복대책위”는 국민과 함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온 국민이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

2014년 8월 11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공안탄압 분쇄 전복대책위원회